## 광주 북구, 주거 취약 계층에 안정적 보금자리 제공한다

'사회주택 조성사업' 추진…LH 협업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활용 '청년도약주택' 총 156세대 조성…'어르신돌봄주택'은 추후 협의

광주시 북구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 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주택'을 조성한다.

북구는 청년과 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부담 없는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는 '북구 사회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이날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 북구 형 사회주택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조성 될 '북구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 할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사업은 북구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 협 업해 진행하며 LH가 마련한 신축매입약정 임대주 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7년 말까지 3곳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우선 총 156세대 규모의 청년 도 약 주택' 2곳를 용봉동 127-3번지(60세대)와 1372-1번지(96세대) 일대에 조성할 방침이다.

북구에 조성되는 첫 사회주택인 '청년 도약 주택 1호'는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후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첫 입주자를 모 집할 계획이다.

청년 도약 주택 입주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북구에서 보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어르신 돌봄 주택' 1곳을 마련할 계획이 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거론되는 '신축매입임대 거점화'의 지자체-LH협업 모델로서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

'신축매입임대 거점화'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서 기존 주거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구축 및 제공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 에 하기 위한 정책이다.

북구는 지역의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 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것 을 방지하고, 어르신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을 주겠다는 것이 북구의 복안이다.

북구는 이번 사회주택 3곳을 조성한 뒤에도 LH 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추가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 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광주전 남지역본부와 협력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며 "앞 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민들 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산림치유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활동

## "몸도 마음도 편안한 '산림치유' 함께해요"

광산구, 국립장성 숲체원서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광산구는 국립장성 숲체원에서 '산 림치유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치유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은 광산구가 추 진하고 있는 사회적 처방에 산림치유를 접목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높이고 건강 데이 터 기반으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당일형 산림치유 사회적 처 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건강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산림치유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스트레스 조사는 신체화 반응, 우울, 분노 등을 분석했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후를 비교했으며, 참여 전에는 88점 만점 중에서 39.59점을 나타냈고, 참여 후에는 11.99점으로 27.6점이 감소했다. 또한 산림치유프로그

램의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 재참여나 주 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프로그램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당일형, 회기형, 1박2일 형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숲속에서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운동, 자연물을 활용한 액자 만들기, 아로마요법(테라피), 오감 자극 걷기 체험 등을 할 수있다. 참여자들은 사전·사후 측정을 통해 건강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는 광산구 건강관리소 이용자를 비롯해 광산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산림치유 사회적 처방은 단순한 야외 활동을 넘어 시민들의 정서회복과 건강 증진을 물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시민 이 일상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텃밭에 채소가 쑥쑥 자랐어요"

광주시 동구 주민과 어린이 등 150명이 지난 17일 동구 내남동 도시농업복합단지에서 농작물 수확 체험 행사에 참여해 상추·케일 등 다양한 채소를 수확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 남구, 새 정부 정책 기조 맞춰 조직 개편

통합돌봄・민주평화인권 선제 대응…주민 삶에 행정 역량 집중

광주시 남구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행정 효율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남구는 18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신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조직 규모 확대보다 효율성에 있다.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총정원은 유지한 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한반도 평화·인권을 강조한 대선공약 등 국정 흐름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남구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삶의 현장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 공백 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체계는 기존 6국·2실·2관·29과·123팀에서 6국·2실·2관·30과·124팀으로 조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희망복지국이다. 기존 5과 17팀 체제에서 6과 18팀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3월부터 전국 시행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합돌봄과'와 '돌봄정책팀'을 신설했다. 이 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반영한 조치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기존 '열린행복과' 는 '민주평화인권과' 로 개편됐다. 민선 7기부터 강조 해온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기조와 맞물려, 남북교류 활성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핵심 시책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총무과 소속이던 남북교류협력팀도 민주평화

남구 관계자는 "인력 증원 없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서구, 7월18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전수조사

광주시 서구는 오는 7월 18일까지 교통유발부 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 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병원, 공연장, 백화점 등이 부과 대상 이며, 서구의 경우 부과 대상이 총 2870개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서구는 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 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번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구는 조사요원 6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멸실·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시설물 운영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로 이기간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감면대상자는 7월 중 미사용 신고기간 내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면 신청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교통행정과(062-360-7830)로 문의하면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 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라며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 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